

녹색연합(GreenKorea)

<027879>

성북구 성북로19길 15 전화) 02-747-8500 전송) 02-766-4180 담당) 정책팀 박수홍

보도자료

10월 31일 (수) 「재생에너지발전시설 입지갈등 해결을 위한 토론회 '재생에너지 입지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에서 개최했다.

○ 재생에너지 확대는 탈원전·탈석탄 그리고 중앙 집중적인 에너지시스템을 정의롭고 민주적인 지역에 기반한 분산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다. 하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공유 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발전원으로 하는 재생에너지발전시설은 그 자체만으로 모두에게 정의로운 시설이 될 수 없다.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훼손하거나, 주민갈등을 유발한다면 재생에너지가 함의해야 하는 에너지 정의원칙에 어긋난다.

○ 녹색연합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유형과 원인을 분석하고,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 첫 번째 기초발제자인 임성희 연구원(녹색연합 정책팀)은 지난 6개월 간 국내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관련 문헌조사, 현장조사, 관계자 인터뷰, 분석 작업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확산 사례의 시사점을 들어 '지역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재생에너지를 설계해야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입지를 둘러싼 갈등당사자들의 다양하고 첨예한 입장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둘러싼 갈등의 쟁점과 원인을 ▲무분별한 입지선정, ▲제도미비 및 변칙활용, ▲지역상생 개념부재, ▲갈등해결 기구부재로 보았다. 갈등 해결 방안으로 ▲시민참여와 주민주도기반 마련, ▲지역상생추구, ▲절차적 참여보장, ▲입지원칙과 규제, ▲편법 탈법 방지, ▲공공부지 활용 확대, ▲갈등예방 및 중재를 들었다.

○ 두 번째 기초발제자인 김성훈 단장(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풍력사업단)은 재생에너지 갈등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책을 중심으로 발제를 이어나갔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입지갈등, 환경훼손, 부동산 가격급등, 소비자 피해문제를 짚어냈다. 사회적 갈등 해소방안으로 ▲ 산지 등 환경훼손방지를 위해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태양광 허가 기준 일시 강화, 산지 태양광 REC 가중치 축소, ▲ 입지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대상사업 사전고지, 사전환경성 검토, ▲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으로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 제한, 태양광 발전소 임의분할 방지 ▲ 소비자 피해방지 지원 시스템 확충을 위해 소비자 피해 사례집 발간, 태양광 상당 통합 콜센터 개설, 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소개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이상범 선임연구원(KEI)은 대규모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발전용량, 개발면적, 도로 연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발전단지 간 이격거리나 누적환경영향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입지갈등이 재생에너지보급 확대라는 정책목표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영범 회장(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은 분산에너지로의 전환은 부의 재분배과정이자 에너지 엘리트권력의 재편과정이기도, 전환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하였다. 질서있는 전환을 위해 환경과 경관, 식량의 균형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수상, 천변, 도로, 한계농지 등의 부지를 우선순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박지혜 변호사(녹색법률센터)는 발전사업허가 전에 환경성 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성 중심의 입지 결정과정과 지자체별 제각각의 규제가 갈등을 더욱 양산해왔다고 보고, 생태축 우선 원칙 등을 담아 환경성 평가가 강화된 입지 요건을 법규에 명시하고 관련된 해석과 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수 이사장(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시민들이 옥상에 발전소를 지을 경우 변전소나 송전선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REC 가중치를 더 우대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협동조합 등에 적극적으로 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통연계비 면제와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며, 정부차원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태환 대표(루트에너지)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제도와 기술로 해결되어가고 있으나 인허가 취소의 1/3이 민원일 정도로 그 심각성이 상당한 상황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함을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외지인과 사업자 중심의 구조에서 협동조합, 공모펀드 등 시민직접 투자와 이익공유로 개방성과 공유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정필 연구부소장(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은 중앙정부의 갈등관리 기구나 지자체 갈등기구 간 역할과 관계정립이 필요하며, 갈등관리 조직 및 기구가 실제로 어떠한 권한을 갖고 프로그램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및 대안적 문제해결 방식이 도입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리빙랩 사례와 유럽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ESTEEM 기법 등을 소개했다.

'재생에너지입지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PDF)은 웹하드 (www.webhard.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 : greenku, 비번 : 8500

2018 10월 31일

녹색연합

문의 : 박수홍(녹색연합 정책팀, 070-7438-8531),
정규석(녹색연합 정책팀장, 070-7438-8532)